

21.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3년 7월 7일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시장(교통국장)
-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0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
 -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년 7월 20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대영 교통국장)

□ 제안이유

-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대구교통공사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, 기존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사업 범위에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 사업 명시(안 제16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종익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대구교통공사 사업 범위에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관련 사업, 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사업, 교통 관련 교육서비스 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고, 기존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이후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조직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의 기능을 통합하고, 교통 서비스 업무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교통공사를 출범 하였으며,
- 사업추진 범위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「지방공기업 설립 기준」²⁸⁾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관련 정관변경을 위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, 경제성 및 조직 분석 등을 통해 신규 사업 확대가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었음.

28) 지방공기업 설립기준(행정안전부(2021.3.23.)) 제2장 지방공기업 설립기준

7.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

- 설립 후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설립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실시

※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현황

- 과업명 / 기관 : 대구교통공사 사업영역 확장 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/ (재)한국자치경제연구원
- 기간/사업비 : 2023. 2. 6. ~ 6. 5. / 89백만
- 과업내용 :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(MaaS, DRT, 교통 관련 교육서비스 등)
 - 관련법 검토 :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지침, 신규사업의 관련법 등
 - 대내외 정책방향 및 경영환경 분석 : 신규사업 추진방향 등에 반영
 - 조직·인력 분석 및 검토 : 타기관 운영사례 등 반영
 - 경제성 분석 및 검토 : B/C Ratio, NPV

※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

구 분	MaaS 및 DRT	교통연수원	학술연구용역
관련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, 대구시 조례 등 관련법	지방계약법 등 관련법
경제성	- B/C : 1.2 - NPV : 32억원	- B/C : 1.64 - NPV : 88억원	-
검토 결과	적 정	적 정	적 정

※ 편익비용비(B/C Ratio) : 편익의 총현재가치 / 비용의 총현재가치, $B/C > 1$

※ 순현재가치(NPV) : 편익의 총현재가치 - 비용의 총현재가치, $NPV > 0$

-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하려는 대구교통공사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, 면밀한 조직분석을 통해 신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답
○ 신교통플랫폼 구축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이며, 대중교통 취약지구인 농촌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.	○ DRT(수요응답형 교통수단), PM(개인형 이동장치)과 버스, 도시철도 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, 당초 DRT 교통체계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수단인 만큼, 대중교통 취약지역까지 신교통 플랫폼 구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○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 관련 교육서비스가 대구교통공사 업무로 신설되는데, 교통연수원을 통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, 기관 통폐합은 직원 승계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,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.	○ 대구교통공사 내에 인재개발원이라는 자체교육원이 있는 상황이며, 현재까지 교통연수원과의 통합계획은 없는 상황임. 기관 통폐합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은 만큼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.
○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대구교통공사 사업 중에 포괄적인 사업이 많아 교통공사 업무량이 과부하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데, 이에 대한 의견은?	○ 신설업무 중 대구교통공사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있는 상황이며,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교통공사가 교통서비스 업무 전반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고,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질 의	답 변
○ 대구교통공사 신설업무 중 교통 관련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대구 정책연구원과의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	○ 대구정책연구원은 장기적인 교통 정책에 대해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, 대구교통공사의 학술연구용역은 보다 조속한 실행이 필요한 교통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역할이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.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